

2006. 12. 06

여성폭력 반대행동 16일

김정란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

지난 11월 26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청계광장에서는 ‘여성폭력추방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실이 폭로되었을 뿐 아니라 장애여성, 이주여성의 인권현실도 고발되었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 미주와 아프리카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여성폭력 반대행동 16일(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의 일환으로 치러졌다.

16일 캠페인의 배경

“여성폭력 반대행동 16일”은 여성국제리더십센터(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의 주창으로 시작된 전지구적 캠페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곧 인권침해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1991년 여성폭력과 인권에 대한 세미나를 위해 이 센터에 모인 세계 각국의 여성폭력추방 활동가들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 간을 “여성폭력 반대행동 16일”로 선포하였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11월 25일이 “여성폭력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이고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또한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12월 6일 몬트리올 학살일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11월 29일 여성인권옹호자의 날도 함께 기념하게 되었다.

유엔여성에대한폭력철폐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젠더에 기반한 모든 폭력 행위”라고 정의한다. 또한 북경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공간과 폭력의 주체에 따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무력분쟁, 임신, 난민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여성에

1)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여대생 14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한 남자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을 추모하는 날이다.

대한 폭력의 내용과 종류를 세분하고 있다.

가부장제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시대와 지역, 계급과 인종을 초월하여 행해져 왔으나,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이거나 지극히 사적인 차원의 일로 간주되어 왔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20세기의 역사에서 무력분쟁 하에 발생한 성폭력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극단적인 여성폭력인 무력분쟁 시의 조직적 성폭력이 국제적인 범죄로 정의된 것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이후의 일이다. 로마규정이 채택되기까지는 90년대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아시아 여성들의 항의와 국제적 관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상성에 반대하고 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에 반대하는 90년대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16일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종식을 촉구하는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여성들은 이 기간을 기념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고,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지역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폭력의 종식을 위해 지역 활동과 국제 활동을 연계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마련하였고,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여성들의 전지구적 연대를 구축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동을 취해왔다.

2006년은 16일 캠페인의 16주년

2006년은 16일 캠페인을 기념한지 16년이 되는 해로서, 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인권의 수호(-)여성폭력의 종식”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에 대한 침해 양자의 연결성을 그 어느 해보다도 잘 보여주는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가 상호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 즉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여성폭력의 추방에 필수적이고, 여성폭력의 종식은 곧 인권의 신장으로 이어짐을 함축하고 있다.

올해의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교차되는 많은 장애물들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무력분쟁, 전쟁, 빈곤, 에이즈, 지구화 등 인권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고 이를 여성폭력에 대한 반대 투쟁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올해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몽골, 중국 4개국이 “여성폭력에 대한 반대행동 16일”을 맞아 ‘여성폭력추방 한마당’을 동시 진행했다. 중국에서는 중국가정폭력반대전국네트워크(China National Network on Anti Domestic Violence)가 ‘가정폭력과 여성의 정신 건강 및 아동폭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길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몽골에서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유엔 연구를 소개하고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화이트리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본은 전국심터네트워크에서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11월 22일에는 12시간 동안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폭력추방 한마당’에 이어 12월 4일과 6일에는 각각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1월 29일 여성인권 옹호자의 날은 지난 2005년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인권옹호자에 대한 국제전문가회의에서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16일 캠페인에 포함되어 기념되고 있다. ‘여성인권 옹호자’란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이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젠더 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신하는 사람이다. 여성인권 옹호자들은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규범에 도전할 때 특히 위협과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캠페인은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그들의 성별 때문에 특별한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지지와 보호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여성, 법과 발전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APWLD)”은 11월 29일 여성인권옹호자의 날을 맞아 방콕에서 아시아의 여성인권 옹호자 모임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이 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기념 행사를 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인권

90년대는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93년 비엔나 선언에는 ‘여성의 인권’이 명시되었고, 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관심의 초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다. 이후 한국, 필리핀, 일본의 여성운동과 이를 배경으로 한 국제적 캠페인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인권문서에 명확히 기록되었다. 구유고와 르완다의 내전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극단적 성폭력은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며,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국제연대가 만들어지고, 폭력 행위자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추동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에 대한 보고서〉, 〈가정폭력에 관한 보고서〉, 〈전시 군대 성노예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심층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차별과 인권침해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문제로 범주화하는 것의 함의는 무엇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간의 권력 불균형과 구조화된 불평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이 놓여있는 차별적 상황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되고 용인된다. 여성폭력을 인권문제로 인식할 때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의 행위자를 처벌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은 임의적 해택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담지자로 위치지어진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의 경험을 포괄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인권담론

과 실천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여성의 경험이 비가시적인 채로 남아 있을 때 인권담론은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할 수 없다. 인권규범은 충분히 보편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인권체계라야 여성 그리고 남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다양한 요소를 파악하고 나아가 젠더관점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인권체계의 변모를 요구하고 있다.